

## FIU,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

-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확산금융 등으로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업권에서 자금세탁방지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 공유
- 제도이행 평가결과(전년도말 기준) 및 차기 제도이행평가 운영시 개선 사항, 유관기관 협조요청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


‘23.10.16(월) 금융정보분석원(FIU)은 이윤수 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2개 금융 유관기관 및 5개 은행 등과 함께 「2023년 제2차 유관기관협의회」를 개최하였다.

동 회의에서 제도이행 평가결과(전년도말 기준) 및 향후 개선사항,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역할 제고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다.

### < 회의 개요 >

- **일시/장소** : '23.10.16일(월) 10:00~11:30 /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
- **참석자** :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, 제도운영과장
  - 은행연합회, 금투협회, 생보협회, 손보협회, 여신전문협회, 농협중앙회, 수협중앙회, 신협중앙회, 산림조합중앙회, 새마을금고중앙회, 카지노협회, 저축은행중앙회, 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농협은행 등 총 17개 기관
- **논의안건** ① '22년말 기준 제도이행 평가결과  
② 내년도 제도이행평가지 변경사항  
③ 유관기관 협조필요사항 등

먼저, 금융회사등의 전년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및 업권별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.

\*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개요  참고

내규 마련 등을 측정하는 부문과 고액현금거래(CTR)에 대한 평가부문은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을 금융회사등이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독립적감사 부문과 고객확인 등을 평가하는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업무 개선을 당부하였다.

\* 분야별 평가결과 점수 : 내부통제 체계 > STR·CTR > 고객확인 > 내부통제 운영 순

또한, 전 업권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전담인력 확충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양성에 보다 힘써줄 것을 요청하면서 관리실적이 많은 업권에 대해서도 현재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전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다음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및 배점조정을 통해 다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우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.

특히 고객확인이 더욱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고객확인 평가에 검증 부분을 추가하고, 전담인력 부문의 배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.

\* 지표개선(예시) : 고객확인 검증 추가 / 배점조정(예시) : 전담조직 평가 +20점 증가 등

마지막으로 개별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회원사 등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
\* 유관기관 역할강화 방안(예시) : 독립적감사 강화방안,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

금융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독립적 감사에 대해서도 유관기관에서 업권 특성에 맞는 점검방법 및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금융회사등이 스스로 취약한 부분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이 가상자산 탈취라는 의혹, 하마스 무장세력이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의혹 등이 보도되는 상황에서,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전 금융업권에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수행 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업권 뿐만 아니라 특히 가상자산업계에서도 확산금융\*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.

\* 확산금융(Proliferation Financing) : 대량살상무기 확산행위를 지원하는 금융활동

우리나라는 IT 선진국으로서 가상자산·신종지급수단 등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어 보다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평가하였고,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거래, 도박 등 사회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검·경과의 수사 공조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.

이러한 대내·외 여건 등을 감안하여,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주요 시중은행도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노력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아울러 내년부터는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보다 확대하는 측면에서 유관 기관협의회를 분기 1회로 확대 시행하고 유관기관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하는 실무협의체\*도 수시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.

\* 실무협의체 논의사항(예시) : FATF지정 위험국가 대응조치 차등화, 자금세탁방지 착안사항 공유 확대, 자금세탁방지 교육시간 조정, FATF 최신 논의사항을 반영한 지급정지 근거마련 논의, 전담인력 관련 기준 조정 등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	책임자	과 장	이진호 (02-736-1750)
		담당자	사무관	홍승미 (02-736-1751)
			사무관	서은미 (02-736-1753)
			사무관	이우혁 (02-736-1752)
<공동>	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	책임자	과 장	박정원 (02-736-1740)
		담당자	사무관	윤송이 (02-736-1743)
<공동>	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	책임자	팀 장	송용민 (02-2100-1730)
		담당자	사무관	유승은 (02-2100-1817)

-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이행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회사등의 AML 위험 및 관리수준을 평가\*하고 있습니다.

\*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는 '12.2월 국제기준을 개정하여 위험관리평가를 의무화

- 평가대상 금융회사등은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으로,
  - 은행 및 금융투자 등 일반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와 카지노 등 다양한 금융거래 업권이 포함되며 그 대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.

\* '23년 현재 자금세탁방지(AML)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은 총 9,000여개이나,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에서 자체평가하는 환전업자와 개별 우체국을 제외하면 약 5,000여개 금융회사등이 평가대상에 해당함

- 평가내용은 각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 위험노출\* 수준과 위험관리\*\*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반기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.

\* (예) 고위험 고객이 많고, 거래금액이 클수록 자금세탁 위험에 많이 노출

\*\* 업무지침·전담부서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구축과 의심거래보고, 고객확인업무 이행정도 등

- 평가를 통해 각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되거나 관리가 미진한 취약부분을 찾아내어 위험을 관리하며,
  - FIU는 고위험 회사와 업권, 취약분야를 찾아내어 검사·감독 및 교육에 활용하고,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포상\*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\* 매년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통해 표창 등 수여

- 평가결과는 금융회사등의 취약부분을 나타냄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되며 각 금융회사등과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실시하는 금감원 등 검사수탁 기관에만 제공되고,
  -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업권의 교육 및 업무 개선을 위한 일부만 안내 되고 있습니다.